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중철

전화 02-2204-4201

보도자료

2023. 1. 19.(목)

제 목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전 장관, 대통령비서실 전 인사수석 등 5명 불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제10조 제2항)
- ☑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2호)
 -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 자목, 제6호 차관급 이상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국회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었던 사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 ❶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❷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❸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❹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사실을 밝혀,
 -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전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전 인사수석·인사 비서관 등 5명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23. 1. 19.(목) 불구속 기소하였음 ※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

1

피고인

- 백운규(남, 58세, 전 산자부 장관)
- 유명민(남, 71세, 전 과기부 장관)
- 조명균(남, 65세, 전 통일부 장관)
- 조현옥(여, 66세,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 김봉준(남, 55세,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선임행정관)

2

공소사실 요지

① 산업통상자원부

- 피고인 백운규, 조현옥

- (공공기관장 사표징구) 2017. 9. 6. 주무부서 국장을 통해 산자부 산하 '발전 4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기관장 4명을 서울 소재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리내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기관장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함

대상 기관 :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전 KPS(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공공기관 내정자 특혜 제공) 2018. 6.경 인사수석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후 공공기관 직원을 시켜,

- ① 마치 내정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하여 작성해 주고,
- ② 면접예상 질의를 작성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특정인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 ③ 내정자에게는 면접예상 질의에 대한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내정자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하여 2018. 3.~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5명에게 유사한 방식의 특혜 제공

- (공공기관 내부인사 부당취소)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KPS(주)에서 2017. 12. 19. 관련 규정에 따라 86명에 대한 직원인사를 시행했음에도 인사수석실이 원하는 후임 기관장 임명 전에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2017. 12. 22. 당시 기관장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앞선 위 직원인사를 번복·취소하게 함

※ 후임기관장은 2018. 5. 25. 임명되어 2018. 6. 7. 직원인사 시행

● 피고인 백운규

- (공공기관 내정자 특혜 제공) 2018. 2. ~ 3.경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추천받은 사람을 내정자로 정하였으나 내정자가 준비 부족으로 공모 마감일까지 지원하지 못하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산자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 ① 임원추천위원회에 산자부의 내정자가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추가 모집을 요구하여 내정자가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게 함

● 피고인 백운규, 김봉준

- (민간단체 임원 부당 교체) 2018. 5.경 대선캠프 출신 인사 중 별다른 경력이 없어 공공기관 등에 정식 추천이 곤란한 사람들을 민간단체에 취업시켜 주기 위하여,

산자부 소관 민간단체(비영리법인)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산자부 내 소관부서 국·과장을 통해 '정치권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 사직하라'는 등의 반복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 ① 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상근부회장에게 별도 직책(고문)을 만들어 고문료를 불필요하게 지급하면서까지 상근부회장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 ② 협회장 및 이사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새롭게 임명하게 함

※ 한국판유리산업협회를 포함하여 2017. 11. ~ 2018. 3.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유탄유공업협회의 상근부회장들로부터 부당히 사표를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피고인 유영민, 조현옥

- (공공기관장 사표징구) 2017. 11.경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장에게

① 과기부 내 주무부서 본부장 및 과기부 1차관을 통해 잔여 임기나 실적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하고,

② 3년 전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또 다시 종합 감사하는 등 사임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해당 기관장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포함하여 2017. 11. ~ 2018. 3.경까지 과기부 산하 7개 공공기관 기관장들로부터 부당히 사표를 제출받음

대상 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③ 통일부

● 피고인 조명균

- (공공기관장 사표징구) 2017. 7.경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을 상대로 주무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하고, 위 기관장이 사직을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장에게 '조속히 사직해 달라'고 요구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함

3

수사 경과

- '19. 1. 24. 산자부 사건 고발장 접수
- '19. 3. 4. 과기부·통일부 사건 고발장 접수
- '22. 3.~12.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 '23. 1. 19.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조현옥, 김봉준 각 불구속 구공판

4

참고 사항

● 수사진행 경과

- 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지원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하기에 이르렀음

※ 동일한 방식의 인사권 직권남용이 이루어진 환경부 사건의 경우 환경부장관에 대해 징역 2년,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2022. 1. 27.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2022. 2. 본건에 대해 본격 수사가 진행됨

● 실무자 및 소극적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 환경부 사건 등 유사 사건의 판결례, 사건관련자들의 지위와 역할 및 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각 부처 장관 등 자신의 권한을 부당히 남용한 직무권한자를 선별하여 기소하였고,
-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참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하였으며,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행정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등] 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관여한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음

※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선임행정관 재직 시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3개 민간단체 임원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 교체하는 범행을 주도하여 백운규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